

월요광장

정부 3.0은 ‘소통’이다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스캔들이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순위에 오를 때마다 눈에 띄는 현상이 있다. 국내 정치·경제 이슈를 덮으려고 일부러 터뜨린 뉴스라는 소위 ‘음모론’이 그것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한류 콘텐츠를 규제한다는 이른바 ‘사드 괴담’이 중국과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 확산되었을 때도 연예인 관련 뉴스마다 사드 이슈를 잠재우기 위한 노림수라는 댓글이 어김없이 달렸다.

물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음모론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데거의 저서 ‘대중은 왜 음모론에 끌리는가’를 보면 ‘음모론’의 발

생 원인 중 하나로 명쾌한 설명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감춰진 듯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 제기되는 음모론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빠르게 사회 속으로 침투한다. 결국 명확한 소통의 부재가 사회적 불신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이 바로 ‘정부 3.0’이다. 정부 3.0을 통해 ‘개방과 공유, 협력을 통해 소통하는,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와 인프라 수준, 온라인 정보의 제공과 정책 참여도 등을 지수화하여 국가별 전자정부 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회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올해는 3위로 순위가 떨어지긴 하였으나, 전 세계 19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정부로서의 국가적 위상은 여전히 자랑스러운 수준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OECD 국가 중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 부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많은 정부 부처에서 축적해 온 통계와 정책 연구 결과를 개방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온 결과

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다. 정부의 방대한 콘텐츠와 민간의 아이디어가 결합해 창업과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대박’을 치면서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다. 다음카카오가 62억 원에 인수한 길 찾기 앱 ‘길기사’와 골드만삭스가 380억 원을 투자한 전월세 찾기 앱 ‘직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개방·공유·협력’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20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사업실명제를 248개 전체 사업으로 대폭 확대했다. 각 사업별 주요 내용부터 예산, 추진 과정,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함으로써 진흥원의 고객들이 원하는 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한 사업 운영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진흥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한국콘텐츠아카데미’는 모바일 서비스 기능을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디자인 및 기능은 물론, 시각 장애인용 워드 음성 지원과 같이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취약 계층을 배려하여 기능을 개선해 더욱 의미가 크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콘텐츠아카데미 웹사이트는 지난 8월 ‘모바일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행정 한류’가 화제다. 지난 5월,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의 협력 요청으로 우리 공공행정 협력단이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방문하였다. 또 8월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요청으로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공공행정 협력단을 구성해 ‘행정 한류’를 전파했다. 정부의 ‘정부 3.0’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소통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칭찬하며,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또 이러한 질문을 받은 사람은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의 ‘소통’을 위한 노력에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이다. 정부 3.0의 본질은 다름 아닌 바로 ‘소통’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법조칼럼

김영란법 시행에 즈음하여



정우중 변호사·법무법인 형제

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례가 지적되지 않아 법조계 내부에서도 아직 어느 범위까지 법에 위반하는 것인지 단언해서 말하기 어렵다. 이에 이 법의 적용대상자들은 작은 부분에게까지 조심하면서 몸을 낮추고 있고,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법값을 계산할 때 까다로운 양자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교육을 했다고 한다. 이 법의 시행에 긍정적인 기대를 걸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법을 제정하게 된 현실이 쓸쓸하게 느껴진다. 유교사상 토대에서 전통적으로 공직에 들어가는 것을 성공의 척도로 여겼던 우리나라에서 청렴결백한 선비정신이 얼마나 부족했기에 ‘3·5·10’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공직자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법까지 만들어야 했을까. 국민들이 우리나라 공직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필자는 현 시대와 같은 상황을 만든 큰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나라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주고받는 대가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만 익숙했지, 다른 사람과 진심 어린 관계를 나누지 못했던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줄을 세우면서 옆 친구와 경쟁하는 것만 배워왔고, 성년이 되어도 성공을 위해 누군가에게 줄을 서야 하는 현실은 부정할 정략과 대가를 가장 효과적인 처세술로 바꾸어 버렸고, 그러한 삶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렇게 맺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를 진심과 진정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면서 성공의 길을 걸어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법조비리 당사자들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라는 말을 들어왔고 소위 일류대학을 나와 승승장구해왔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훨씬 많은

것을 누려 왔음에도 그들만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었고 결국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아니 나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주고받는 대가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만 익숙했지, 다른 사람과 진심 어린 관계를 나누지 못했던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줄을 세우면서 옆 친구와 경쟁하는 것만 배워왔고, 성년이 되어도 성공을 위해 누군가에게 줄을 서야 하는 현실은 부정할 정략과 대가를 가장 효과적인 처세술로 바꾸어 버렸고, 그러한 삶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렇게 맺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를 진심과 진정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면서 성공의 길을 걸어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법조비리 당사자들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라는 말을 들어왔고 소위 일류대학을 나와 승승장구해왔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훨씬 많은

기고

전남농업박물관의 새 풍경



김우성 전남농업박물관장

는데 따른 보람의 표현이자 박물관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된 때문이라다. 사드 문제로 하반기 예약이 취소되긴 했지만 봄, 가을 성수기 중국 관람객이 넘쳐나는 점은 여전히 확연히 다른 풍경이다. 또한 상시체험으로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가 하면 농업공원에서도 바이트, 허브식물원, 코스모스단지, 수확체험 등이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며 6차산업으로의 농업관광 가능성을 가능케 해준다. 지난 1993년 문을 연 전남농업박물관이 24살로 23주년을 맞았다. 예로부터 농경문화를 꽃피웠던 전남은 농도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숨결이 이어져 오는 예향의 고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들은 농업의 중요성은 물론 바·보리가 무엇인지 구별조차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래 닥쳐올 식량위기를 감안, 우리의 농촌현실을 더욱 애정을 갖고 이해하고 농촌 회생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때다. 전남남도도는 일찍이 이러한 일을 염려해 농도의 특성을 살리고 사라져가는 농경문화유산을 수집 보존 전시해 조상들의 슬기로운 삶을 후손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 농업박물관을 개관했다. 박물관 본연의 기능은 물론 청소년·젊은이들에게 농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사회교육의 장으로서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중이다. 우선 참체에 있는 농촌 활성화를 위해 박물관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청년쌀요리경연대회, 연날리기대회, 매추만들기 체험, 전통혼례, 허수아비만들기대회 등 각종 체험행사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로부터 하여금 잊혀져가는 전통 농경문화와 조상들의 얼을 되새김은 물론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비롯한 농촌사랑운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행사 때마다 참가자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점으로 미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이다. 새로운 풍경 가운데 첫째는 뽀뽀뽀해도 중국 관광객 인파다. 4~6월이면 이들은 하루에도 수백 명씩 박물관을 찾아 한복패션쇼며 전통무용, 가야금 연주 공연 등을 즐기며 남도음식체험을 하기도 한다. 사드 문제로 하반기 예약이 취소됐지만 올 4~6월에만 5천671명이 박물관을 찾는 등 예년에 없던 새 풍경을 연출해냈다. 상시체험장의 요리체험, 천연염색체험, 한지부채만들기와 무화과축제 등도 이채로운 풍경이다. 소망의 넝쿨터널과 사계절 꽃동산, 이태 전 문을 연 쌀문화관, 기획전시실 등도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농업공원에서도 모내기, 수확체

험, 정월대보름행사과 전국연날리기대회 등 행사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게다가 유채벼로 ‘청년♥전남’을 연출한 아트바단지과 빨강, 분홍, 하얀색의 코스모스단지가 화사하게 모습을 드러내면서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광객들에게 힐링을 주고 있다. 여기에 올봄 조성한 허브식물원과 애완가축장의 양떼와 염소, 토끼, 소 등이 입소문을 타고 있어 향후 농촌관광의 메카로 자리잡을 게 분명하다. 특히 농경문화관의 현대농업코너와 3D영상실을 활용, 젊은 농업인들의 활동상과 미래농업 영상물을 상영하고 있어 청년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래 농업전시실로 업그레이드할 계획도 갖고 있어 농업공원의 허브식물원·허브체험장(추후 계획) 등과 함께 젊은 농업인은 물론 일반 관광객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게다. 이제 농업박물관은 학생들에게는 체험 학습장이자 시청각교육장이요, 청년들에게는 농업에서 비전을 찾게 해주고, 일반에게는 고향의 향수를 만끽하고 어머니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이 가을, 새 풍경의 농업박물관은 분명 여러분의 허전한 가슴을 풍요롭게 채워줄 ‘명품 체험 관광’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자부한다.

社說

쌀값 폭락 농민들의 타는 가슴 재가 되는데

농민들은 흉년으로 농사를 망치면 털어 주기 위한 쌀값 안정 대책이 절실 말할 것도 없지만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이 들어도 걱정이야. 잘 되나 못 되나 농민들은 이래저래 걱정으로 해마다 속을 태운다. 대풍이 예고되고 있는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가슴은 타다 못해 까만 재로 변할 지경이다. 올해 쌀 생산량은 400만t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쌀값은 30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얼마 전 도지사를 지낸 어느 국회의원은 최근 SNS에 글을 올려 “봉급생활자들에게 30년 전 봉급을 받고 살라고 하면 수용하겠느냐?”고 물었다. 문제는 대풍과 함께 쌀값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쌀 생산량은 지난 3년간 매년 400만t을 웃돌았다. 그러다 보니 현재 쌀 재고량도 200만t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반대로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이 캄캄하지만 한 농민들의 한숨을

달려 주기 위한 쌀값 안정 대책이 절실하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한 간담회에서 올해 쌀 생산량이 적정 수준보다 35만t 정도 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과잉 물량’인 35만t을 전량 정부가 구매해서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추곡 매입 가격도 작년과 같은 수준(5만2000원)으로 올려 줄 것을 요구했다. 늘 나오는 얘기이지만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쌀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빈곤국이나 북한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보내는 방식으로 시장 공급을 조절하는 제안도 빠지지 않는다. 20대 국회의 첫 정기 국정감사가 곧 시작된다. 농민들은 이번 국감에서 신곡 수요량 이상 생산된 물량을 전격 격리하겠다는 정부 대책을 이끌어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도 이왕 시장에서 격리할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 시행함으로써 조기에 쌀값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 조이롱 자동차 광주 투자 차질 없도록

광주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중국 조이롱(九龍) 자동차가 최근 한국 법인을 설립했다. 자동차의 제조·판매를 위한 한국 법인 ‘조이롱 코리아’가 등기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린 것이다. 중국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시에 본사가 있는 조이롱 자동차는 승합·미니버스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조이롱 코리아는 광주지역 기업과 협력해 시험·상업용 자동차 200여 대를 우선 생산하고 2017년부터는 15~18인승 전기승합차인 E6 차량 2000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에는 전기승합차 2만 대, 다른 차종 8만 대 생산 규모의 공장을 완성하는 데 총 2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지난 3월 광주시와 협약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광주는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에 성큼 다가서게 된다. 조이롱 코리아는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전기자동차를 생산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꽤 높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장 국내 자동차 인증 통과라는 까다로운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자동차 주요 부품과 AS부품에 대해 안전 및 성능과 관련한 기준 인증을 취득한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는 중국 현지 제품을 가져와 테스트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국내에서 실제 생산된 제품이 규정을 무난히 통과하려면 광주시와 지역 자동차 업계의 적극적인 행정·기술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양산 체제를 갖추는 데 관련된 투자금 확보도 큰 숙제다. 전 세계 자동차는 안전과 경제성은 물론 환경보호 분야 등에서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투자자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력 차종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매력력을 느끼도록 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역량을 결집해 국내의 시장에서 경쟁력이 꽤 높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無 等 鼓

“5월 서남쪽 사비하에서 큰 고기가 나와 죽었는데 길이가 세 발이었다. 8월 여자 시체가 떠내려왔는데 길이가 18척이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5m 가량의 괴물고기와 거인 여자 시체에 대한 소문이다. 삼국 중 군사력이 가장 약했던 신라는 백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외교적으로는 당나라와 손잡고, 내무로는 화랑을 양성해 군사력을 키웠다. 이외 중요한 작전이 백제에 침자를 파견해 유언비어를 퍼뜨려 백성과 조정을 갈라 놓는 것이었다. 괴물 이야기로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든 뒤, 그해 9월 “대궐 뜰에 있는 해 나무가 사람이 곡하는 소리처럼 울었다”는 소문을 뿌린다. 백제의 국운이 다했다는 분위기를 조성기 위한 책략이다. 이들 소문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지만 백제는 소문의 근원을 파악하지 못했던 탓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 더욱이 이 시기는 의자왕이 국경에 태어난 때인지라 소문의 효과가 배가돼 백성의 불안감과 반감을 한층 컸다. 경복 경주 대지진 이후 열을 동안 /채희중 사회2부장cha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1)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